



제15차 노인인권포럼 토론회

**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노인복지법,
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안 마련**

2024. 4. 24.

장인수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)

지역 인구 위기: 지역 인구 규모 감소와 지역 초고령화에 따른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 간 괴리 심화

- ▶ 인구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(감소한) 지역은 대체적으로 인구 초고령화가 급격하게 심화되는(심화된) 경향
- ▶ 지역 인구 위기에 대한 여러 정책적 논의의 기본적 방향은 여전히 떠나는 이들 (특히, 청년층)의 유출 방지 및 유입 도모에 크게 집중하는 경향, 남아 계시는 분들 (어르신들)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감
- ▶ 남아 계신 분들과 관련하여 이들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대응의 중요성
: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, 지속가능성 제고 절실
- ▶ 현재의 과제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보편적 확대에 대한 다각적 현안 검토

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담보

- ▶ 선도사업의 재정은 매칭+건보+장기요양보험+지자체 자체 자원 등
- ▶ 지역사회(지자체)의 정책 추진 여건에 적지 않게 좌우되는 경향
- ▶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(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) 지자체의 정책 수요를 긴밀하게 고려하는 것임.
- ▶ 매칭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는 지역은 인구 초고령화, 인구 규모 감소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의 악순환 경험 가능성 증대 ->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 간 괴리 심화 -> 정책의 사각지대 상존, 심화 개연성 증대

(참고) 무조건적인 예산 규모 증대가 아닌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우선

-> 그간 축적된 사업 예산집행률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(예산집행률이 낮은 근거, 지역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사업 집행 여부 등)

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

- ▶ 관련 법령에 중앙정부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명시
- ▶ 관련 법령과 다른 법령 간 연계 방안 모색: 예컨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(고령자 관련 지원 내용 전무),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 관련 특례 추가 명시 등
- ▶ 지역활력타운 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: 복지부 돌봄 사업 역할 강화, 신규사업 지역 개수 확대,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등
- ▶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에 대하여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의 조성 대안도 고려
: 지역의 자립적인 생활 돌봄지원 기반 구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안이 요구

전국적 최소지원(national minimum)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개선 대안 모색

- ▶ 기초생활인프라의 전국적 최저기준(2018.12)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발굴과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
: 실제 이용자 접근거리, 희망거리, 만족도를 포함하여, 정책 수요자들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한 입지분석 요구
- ▶ 다만, 재가서비스 등 일반적인 생활인프라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 수요자 및 정책 추진 여건(정책 공급)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분석 필요

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 수요의 정교한 파악

- ▶ 돌봄 대상자 발굴과 관련된 담당자 업무 가중, 애로사항 문제가 지속 지적
- ▶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 정책 수요 파악, (잠재) 정책 수요 대상자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필요



감사합니다.